

【 해외금융뉴스: 유럽 】

독일, 전후 최대 규모의 경기부양 계획

- 독일은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경기 악화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, 전후 최대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힘.
 - 2008년 실시된 독일의 1차 경기부양책은 현재의 급격한 경기변동을 대처하기에는 미흡했기 때문에 확대된 경기부양책이 서둘러 계획됨.
 - 금번 경기부양책은 2009~2010년에 걸쳐 집행될 예정이며, 규모는 2차 대전이후 최대인 500억 유로(980억 달러)로 알려짐.
 - 경기부양 예산의 약 35%(170억~180억 유로)는 인프라구축 투자 및 기업과 개인 대상의 감세에 사용될 전망이다.
 - 이밖에 경기부양책은 초과 자녀에 대한 일회성 조세 환급, 친환경 신차구매 혜택 제공을 통한 자동차산업 지원, 건강보험료 인하를 통한 소비자 소비 촉진 및 임시고용직 창출을 포함함.
- 유럽지역 경제권의 중심이었던 독일이 최근 몇 개월 동안 그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는 징조가 여러 데이터에서 포착됨.
 - 2008년 4/4분기 실질 GDP가 -2%를 기록하여 2008년 전체적으로는 1%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, 2009년에는 전후 최악인 -3%를 기록할 지도 모른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음.
 - 산업생산과 제조업 수주의 하락 속도도 다른 유로 국가에 비해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, 실업률도 점차 높아져 가고 있음.
- 한편 전문가들은 독일의 경기부양대책이 2009년 상반기 경기위축을 되돌려 놓기에는 늦은 감이 있다고 언급함.
 - 금번 2차 경기부양대책은 글로벌 경제가 회복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할 2010년이 되어서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봄.
 - 2차 경기부양 계획이 늦은 이유는 집권보수당인 기독교민주당(Christian Democratic Union)와 중도좌파당인 사민당(Social Democratic Party)의 정치적 이니셔티브를 갖기 위한 협상 과정에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됨.

(The Wall Street Journal 1/13)